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해양특별시라는 명칭에는 해양 수도라는 의미가 있어 수도 개념의 위험성과 맞지 않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성 낮은 명분보다는 실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산해양특별시와 부산해양특별자치시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나 부산이 국제해양항만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홍콩, 상하이 등과 같이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규제를 없애는 특례와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특례 조항 등이 있다.

다른 점은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안에는 해양특별

시 안에 있던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특례 △부산통관 관세의 부산 환부 조항이 삭제된 반면 △항만 및 해양관련 사무는 부산시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의해 처리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산에 이미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폐광지역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를 고수할 이유가 없고, 오거돈 해양부 장관이 부산시 부시장 출신인 만큼 부산시장과 해양부 장관이 협의해 해양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부산항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 의원 등은 이같은 방안을 지난 2월5일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컨부두공단 광양 조기이전 결정

3월말 건설본부 이전 등 내년말까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이 광양항의 적기개발과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해 본사 광양 조기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이기 컨부두공단 이사장은 2월14일 컨공단 광양사업단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광양항 개발의 핵심부서인 건설본부를 올해 3월말까지 우선 광양으로 이전하고 총무팀 등 나머지 부서는 광양항 마린센터가 준공되는 내년말에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컨공단은 현재 운영지원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며 건설본부가 3월내로 이전하면 컨공단의 총인원 110명중 광양 근무인원은 현재 31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장과 건설본부장이 광양에

상주할 계획이다.

컨공단은 본사 광양이전 조기이전을 위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직원 숙소를 준비할 계획이며, 전남도와 광양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이기 컨공단 이사장은 본사의 광양이전으로 컨공단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함과 더불어 반드시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컨공단 관계자는 본사의 광양이전은 정부의 강력한 광양항 육성정책의 의지표현으로서 앞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